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중로구 인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안 호텔 PSPD, 나우누리 유선: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김형완, 조현희: 723-5302)
제 목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가두집회
날 짜 1998. 2. 18. (총 쪽)

보 도 자 료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가두집회

일시 및 장소: 1998년 2월 18일 12시 법원앞 삼거리(삼성프라자 앞)

참여연대는 오늘 12시 법원앞 삼거리에서 의정부 수좌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집회를 연다.

그동안 고위 법관의 수좌설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지만 그 때마다 의혹으로만 남은 채 그친 바 있고, 심지어 김현철과 관련한 공판정에서는 검사가 재판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법조현실에 대해 경고까지 한 바도 있었다.

이번 이순호 변호사사건의 경우는 수표추적을 통한 계좌 확인까지 드러나 피할 수 없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반적인 법조계의 비리에 대한 법원의 진상규명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촉구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박상증

* 집회취지 및 순서 별첨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가두집회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일시 : 1998년 2월 18일 (수) 12 : 00

장소 : 법원앞 삼거리 부림빌딩 (신한은행, 삼성프라자 앞)

■ 집회제목

법조비리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

■ 집회취지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수뢰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조계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사법부가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을 관망할 수만은 없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 집회구호

판사.변호사의 뒷돈 거래 사법정의 웬말인가
판사의 수뢰여부, 철저 수사, 엄정 처벌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구조적인 진상규명, 법조비리 완전근절

멋대로 수뢰판사, 법대로 처벌하라
사법부의 썩은 양심, 국민은 분노한다

수뢰판사, 즉각 업무 정지하라

형식적인 미봉책이 사법비리 부추긴다

사법정의 주역으로 법조계는 거듭나라
뒷돈 받는 양심으로 범죄판결 왜말인가

비리법관 중징계하고 법조계는 각성하라
정치고려 배제하고 소신수사 보장하라

< 순 서 >

12 : 00 - 13 : 00

사회자 : 김형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집회지

1) ~~결과~~보고

2) 수사촉구 발언 - 심병호 (참여연대 사법재자리놓기시민
모임 회장)

3) 시민발언 - 엄한얼 (참여연대 사법재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

4) 성명서 낭독

5) 집회 마무리

* 집회 사이사이 구호 제창 / 피켓팅 / 유인물 배포

인권보루 사법부에 뒤통자맞는 게 왜 말입니까?

마침내 부패에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재벌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아도, 그리고 교수가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도, 그렇게 아 새상찬지가 온통 부정부패로 다 썩어도, 오직 정의와 광명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사법부, 법원만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썩어도 결코 썩어서는 안될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랄 수 있는 법원마저 부패의 썩은 가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정의란 말입니까?

검찰은 즉각 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합니다.

이순호변호사 비리사건으로 드러난 의정부 지원 판사들에 대한 수사는 결코 미온적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소위 '자체진상조사'라는 명목 아래 의례적인 미봉책으로 이러한 비리를 모면하려 한다면, 그리고 법원도 검찰도 대중대중이 국민만을 모면하기 위해 단지 임기응변만으로 일관한다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결국 땅 끝에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할 경우 어떻게 땅 끝에 떨어진 사법권위를 되새울 수 있으며 또 어느 누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법원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법조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에 대해 관련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통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직무상 수뢰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아반 가화에 법조계에 관행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구조화 된 비리도 근절할 수 있는 '법조비리근절대책'을 강구해서 이 나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권보루 사법부에 뒤통자맞는 게 왜 말인가!

국민들은 경악한다 사법부의 뒤통자맞!

법조비리근절하여 사회정의 바로잡자!

법조부패에 국민들은 요구한다 검찰수사 엄정처벌!

전관예우 뒤통자맞는 게 왜 말인가!

법앞에 상하없다 법앞에 만인평등!

1998년 2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